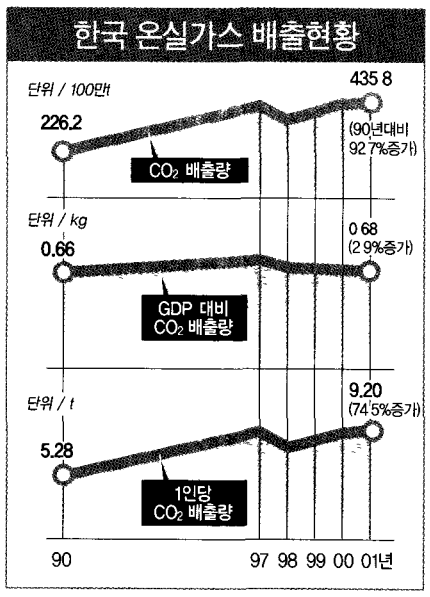
열관리인이라면 알고 넘어갑시다!

교토의정서… 지구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세계가 빠르게 성장해감에 따라 지구도 빠르게 변해갔다. 산업혁명이후 지구는 더워지기 시작하여 이제는 세계의 기후가 바뀌게 되었다. 세계는 이러한 기상이변을 막고자하는 노력이 시작되었고, 그 대안으로 '기후변화협약'을 만들었다.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교토의정서(온실가스 규제 규약)가 채택된 지 7년만인 올해(2005년)초에 발효될 것이라고 한다. 러시아정부가 교토의정서를 승인하고 비준을 요청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이다. 의정서가 국제협약으로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비준국 가운데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90년 기준 전체 배출량의 55% 이상이면 된다.

그 동안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미국과 함께 의정서의 실천을 미뤄온 러시아가 비준함으로써 미국을 배제하고도 발효될 수 있다. 현재까지 의정서에는 EU와 일본을 비롯한 125개국이 비준했다(한국은 2002년 11월 비준).



1. 교토의정서란?

온실가스의 증가로 지구가 온난화되고 기상의 이변이 일어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92년 유엔은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였다. 이는 2000년까지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으나 실행이 뒤따르지 못하자 협약 당사국들은 97년 12월 일본교토에 모여 구체적인 교토의정서를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선진국들(선진38개국 · 미국, EU,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 등)이 2008~2012년 동안 이산화탄소, 프레온가스, 메탄 등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여섯 종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보다 평균 5.2% 줄이는 것이다. 즉 미국은 7%, 유럽연합은 8%등 나라별로 정해진 목표량을 지키지 못하면 벌칙을 받아야 한다.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의무량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되어있다.

교토의정서처럼 중요한 국제적 약속은 나라별로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를 비준이라고 한다. 교토의정서 의무감축국 가운데 이를 비준한 나라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합계가 모든 의무감축국의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5%를 넘어야만 발효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6.1%를 차지하는 미국이 2001년 교토의정서를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7.4%로 배출량 2위인 러시아, 그리고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들이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많은 나라가 교토의정서란 약속에 서명은 했지만 그 약속의 효력은 아직까지 나지 않은 단계이다. 그러나 다행이도 캐나다가 2003년 비준에 동의했고, 2004년 현재 2위의 러시아도 비준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55%가 넘게 됨으로써 교토의정서 발효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2. 한국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당장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여기에 동참하라는 선진국들의 외교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1999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열 번째로 많았다. 미국이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교토의정서 탈퇴 이유가 한국과 중국, 인도같은 나라들도 의무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지 선진국만 줄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점이었다.

2004년 10월 3일 국제 에너지기구(IAE)가 공개한 '세계주요에너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2년 한 해 동안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를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미국도) 배출량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된 반면 한국이 배출한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는 모두 4억 5155만t으로 국가별로는 세계 아홉째였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한국은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앞질러 우리의 사정은 더욱 다급해졌다.

게다가 선진국에선 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한국은 2013년 이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감축에 참여하느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협상에 임해야 할 처지지만 정부나 업계는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